

2002년『월간양계』선정 10대뉴스

- 홍보팀 -

1 양계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채용 가능

정부는 지난 7월 17일 국내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연수생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업연수생을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업에는 처음으로 5천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배정되는 등 농림부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농림부는 농협중앙회를 사업기관으로 정하고 양계업을 포함한 각 업종별 배정방법 및 배정인원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1995년 본회에서 양계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 고용희망 근로자수가 1,00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월에는 양계분야에 최소 6,8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농림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양계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대책, 자격조건, 임금 등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으나 최근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이 1년간 연장되고 산업 연수생 수를 늘리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당분간 인력난에 따른 혼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보도 파문

SBS-TV에서 신년특집으로 마련한 다큐멘터리 '잘먹고 잘사는 법'이 방영되면서 채소값이 급등하고 닭고기를 포함한 일부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당시 소개된 방송내용을 보면 육식위주의 미국식단을 소개하면서 좁은 축사에서 사육된 가축이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일본의 BSE(광우병) 파동, 닭의 부리 자르는 모습 등 소비자들에게 협오감을 불러 일으켜 양계산물은 물론 전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소지가 많은 내용을 방영하는 등 축산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중점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축산업의 위기를 몰고 올 소지가 높다는 판단아래 SBS에 방송계획을 취소하도록 강력히 항의한 바 있으며, 차후 설날에 재방영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방영취소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추석직전인 9월 2일부터 4일까지 같은 프로가 한국방송대상 수상작이란 명목으로 재방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육계가격이 500원 이하로 떨어지고, 계란가격도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주어 양계업계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3 기록적인 육계 불황, 종계 도태사업으로 이어져

금년도 여름 복경기에도 아랑곳없이 하락세를 보인 육계가격이 지난 6월부터 5개월여 동안 생산비 이하를 기록하면서 육계인들을 괴롭혔다. 특히 9월하순에는 kg당 300원이라는 기록적인 가격을 보이면서 닭고기 유통에 마비현상을 가져오기까지 하였다. 이같은 어려움은 지난 1987년 10월 이후 최악의 어려움으로 기록되었으며, 산지 월별 평균가격을 보면 6월 943원, 7월 853원, 8월 706 원, 9월 696원, 10월 881원으로 불황의 골이 깊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양계수급안정위원회는 육계불황타개책의 일환으로 본회 및 계육협회를 사업기관으로 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40일간에 걸쳐 40만8천수에 달하는 종계를 도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번 조치는 금년 6월부터 5개월여 동안 육계 산지가격이 생산비를 크게 밀돌면서 육계 불황이 장기화되었고, 특히, 금년도 종계 생산잠재력이 600만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견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양계업에 있어서 도태장려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도태 장려금은 11개월령(2,000원)부터 14개월령(500원)까지 차등지급되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약 746만여수의 병아리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번 종계도태로 인한 병아리 감축 효과는 전체적인 종계인 및 계열사들의 참여의식 결여로 계획에 다소 부진함을 보여줬지만 정부에서 양계분야에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4 태풍 '루사' 양계업에 심각한 피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전국을 강타한 제 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양계업을 포함한 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원도로 축산업에서만 2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계분야도 닭 45만여수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 지부·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해실태를 보면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닭 34만여수의 피해와 계사 72동이 완파 또는 반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계가 산란계 보다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 44만8천수, 경남 5만3천수, 경북 9만9천수, 전남 15만2천수, 전북 3만8천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회에서는 피해농가를 방문, 위로하는 등 복구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5 양계업 등록제로 전환

농림부는 그 동안 신고업이나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이 등록제로 전환되어 앞으로는 반드시 해당 시나 군에 등록을 해야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최근 늘어가고 있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농림부는 등록대상 가축의 범위와 사육규모, 등록기준 등 축산업의 등록제의 구체적 내용은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며, 양계의 경우 1만수 이상을 사육규모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공포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등록도록 할 방침이며,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사육을 못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업 축산업 참여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들의 의견 등이 수렴되면서 여전히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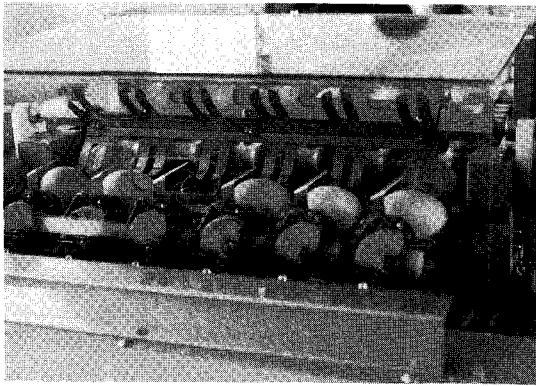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본회를 비롯한 축산업계가 17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일명 축산업 자조금법)이 지난 4월 17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이후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1월 14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자조활동자금을 설치코자 하는 축산단체(본회 등)는 육계, 산란계 각각 150명으로 확정된 대의원을 축산업자 수와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구성하게 되며, 생산자, 학계, 공무원, 소비자, 유통전문가로 구성된 15인의 자조활동자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출금납부 및 수수료 거출금 등 필요사항을 정하는 등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자조금 거출과 관련해서는 축산업자가 선출한 대의원 2/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거출할 수 있으며,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거출금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자조활동자금관리사무국의 설치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생산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본회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7 계란·닭고기 검사기준 강화

금년 8월에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식용란 및 닭고기의 검사기준이 강화되



가공·가열처리하지 않고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통중인 식용란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해 압류, 폐기 또는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위생적인 계란생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닭고기도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의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화에 따른 규정이 강화되는 등 깨끗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육계계열생산 위탁표준계약서 발표

본회는 육계 계열화 참여농가 비율이 증가하면서, 계열업체와 사양가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사육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육계산업발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육계계열생산 위탁표준계약서'를 제작, 지난 10월 17일 공식 발표하였다.

본 계약서는 지난 2001년 1월 국내외 계약사육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양계농가(일반, 계열)를 비롯하여 학계, 연구계 등 관련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ask force팀을 운영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친 보완작업 끝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계약서는 그동안 계열주체들의 일방적인 계약으로부터 벗어나 계열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계약사육 체계를 정착시켜 육계업계발전을 꾀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계약농가와 계열사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오는 12월 18일 공청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9 ND 백신공급 확대 등 방역 강화 지침 마련

농림부는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뉴캐슬병 등 닭 질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로 하고 농가의 예방약 100% 지원에 이어 예방접종, 소독 등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와 도축장을 집중 단속키로 하는 등 ND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농림부에 따르면 ND질병 근절대책('01~'05년)의 일환으로 '01년부터 뉴캣슬병 예방약을 100% 지원(8억수분)한 결과 '01년에는 '00년 대비 50%로 발생량이 줄었으나, 금년들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예방약 부족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8월초부터 ND예방백신 부족물량을 추가(224백만수) 공급하고, 종계장·부화장 및 닭도축장에 대하여 방역관리 실태점검 및 사료·닭 수송차량의 소독강화 등을 포함한 '뉴캣슬병 방역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금년내 '닭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과 뉴캣슬병방역지침(SOP)이 제정될 경우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농장주인이 발급)가 없는 병아리의 유통제한은 물론 닭 도축장에서의 도계도 금지된다.

10 계란·닭고기 등급제 실시 난항

시행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계란등급제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경북양계축협 대구집하장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간 이후, 금년 7월부터는 3개 작업장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닭고기 등급제도 2003년 실시를 앞두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계란등급제의 경우 현재 4개작업장에서 20여만개의 계란이 등급판정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양계인들은 계란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매 분기마다 평가회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과 관련하여 지난 4월 30일 이후 현재 까지 전혀 평가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약속 이행에 따른 양계인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닭고기 등급제의 경우에도 현실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시행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해서도 닭고기는 15원(징수요율 2%), 계란은 1.5원(1%)을 부담케 한다는 안이 나와 타 가축인 소(0.07%), 돼지(0.2%)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받아들여져 생산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양계**

